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2년 11월 23일

<포럼>

日 자민당 우경화는 自充手

박철희/서울대 교수·국제학, 일본연구소장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2009년 말 일본의 한 연구 모임에서 자민당의 장래를 묻는 질문에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서 우경화(右傾化)할 공산이 크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11월 21일 발표된 자민당의 공약은 필자의 우려를 훨씬 넘어설 정도의 고강도급 우경화 종합 세트였다.

강한 일본의 재생을 내세운 자민당 공약에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축하하고, 자학사관(自虐史觀)을 극복하며, 교과서 검정 때 근린(近隣) 조항도 수정하고, 군대위안부 연설에 대해 정확한 반론을 가하며, 영토 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등 중국과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약속들을 서슴없이 포함시켰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이외에는 대부분이 주변국에 대한 반발성 메시지들로 가득 찼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은 창립 멤버인 하토야마 유키오가 ‘자민당 노다파’라고까지 비판할 만큼 자민당과 구별되지 않는 정책들을 채택했고, 급기야 그는 노다와 의견 대립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리버럴, 중도파, 보수파가 함께 사는 한 지붕 세 가족이었던 민주당은 리버럴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중도파는 당을 떠나거나 목소리를 죽이고 있어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12월 16일 총선 정국에서 새로운 현상은 자민당의 우경화와 더불어 우익 성향을 띠는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의 연합에 의한 제3세력의 전면 부상이다. 리버럴은 점점 밀려나고 보수와 우익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우경화란 말을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

우경화된 일본의 정치권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은 자기들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상대로만 보인다. 미국에는 순종했던 일본이 중국에 세계 경제 2위의 자리를 내주고 나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 군대위안부와 독도 문제 및 천황 관련 발언으로 일본에 사죄만 요구하는 나라로 비치면서, 우익들은 역사 부정과 왜곡을 개의치 않고 있다.

과연 일본의 일반 유권자들이 이같은 우익적인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조할지는 의문이다. 이웃 나라들과 갈등적 요소만을 키워가는 일본의 자세가 침체한 일본 경제를 살릴 리도 만무하고, 역사에 대한 반성(反省) 없이 자위권 강화와 개헌(改憲)을 외치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매력적일 리도 없다. 동아시아가 갈등의 본산이 되길 바라지 않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에도 일본의 우경화된 움직임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담일 것이다.

설령 자민당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위안부 강제성 부정 등 자민당 정권 시절의 자기부정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펴고,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가는 국가에서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법 개정의 이유가 우익적 사관에 기반한 구체제의 정당화라면 죽어가던 일본 내 리버럴들도 다시 힘을 합칠 공산이 크다. 자민당의 장래에도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선택을 끝까지 밀고 가려 한다면 불행을 초래할 자충수(自充手)다.

하지만, 자민당의 그릇된 선택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고쳐질 수 없고, 비난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일본의

우익들을 더 기쁘게 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일본의 빗나간 시대 인식과 역사에 눈을 감은 구 체제로의 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기보다는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상식을 일탈한 일본의 인식과 행동에 대해 자유주의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도(正道)를 걷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